



[산업] 현대모비스 수소차 전지 활용 공장에 무공해 전력 공급 06



Life

[마켓] 서스틴베스트 대표 "사회책임투자 전세계 트렌드" 08



市 산하기관도 안지키는 생활임금, 자치구만 큰 부담

(빈곤탈피 적정소득)

생활임금 제도 실효성 의심돼 적용대상자·금액 급격히 늘어나 25개 중 22개 자치구 부담 느껴 각 자치구 특성 고려해 통합돼야



최봉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에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가 많아지고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산하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자치구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공단에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상담원 35명 전원이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 더 적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3일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은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직장 대표를 고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난 후에야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본청 및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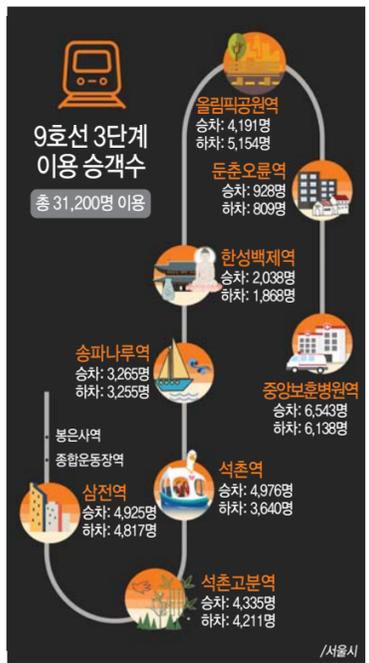
된 2016년 3602명(20개 자치구), 2017년 4884명(21개 자치구), 2018년 6663명(23개 자치구)에서 올해 7131명(25개 자치구)으로 늘었다.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2016년 62억9000만원, 2017년 105억7600만원, 2018년 142억3000만원에서 올해 169억2500만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약 2.7배 늘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때와 비교해 30여억원 많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예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인데 비해 25개 자치구는 평균 29.3% 밖에 되지 않았다. 시의 예산지원이 있는 생활임금제 통합안에 찬성하는 자치구도 10곳이나 됐다.

최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임금제 통합안을 마련하기 전에 각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서울시와 생활임금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9호선 3단계 개통 한달... 송파·강동구 승객 늘어



교통카드 데이터로 본 9호선 3단계 승차인원 하루 평균 3만명 중앙보훈병원역 최다 이용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호선 3단계 승차인원은 일평균 3만1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이 6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9호선과 환승 가능한 석촌역이 5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통 전과 비교하면 3단계 노선이 지나가는 송파구·강동구의 지하철 이용객수는 일 평균 50만3000명에서 53만1000명으로 2만8000명 늘었다. 반면, 버스는 39만4000명에서 38만3000명으로 1만1000명

줄었다. 신설역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성내1·3동(15.4%), 명일2동(9.3%), 오금동(8.5%)에서도 기존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를 타고 와서 9호선 3단계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 구간 탑승객 10명 중 4명은 송파·강남(송파구 18.4%, 강남구 15.7%, 서초구 7.3%)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로 이동한 승객도 10% 가까이 됐다. 송파나루, 한성백제역이 인접한 방이2동 기준으로 도착지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삼성동까지 가는데 2회 이상 갈아탄 사람의 비율이 전체 61%에서 개통 후 17%로 줄었다. 서울시는 교통데이터에 담긴 서울 시민의 일상을 카드 뉴스로 정리해 서울교통정보센터(토픽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한겨울 서울시민들의 놀이터로 제 역할을 했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3일 철거되고 있다. /연철뉴스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세금납부 유예·결손처분 방안 추진 경제력 확인 후 맞춤형 징수활동 계획

경기도가 생계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오는 3월부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 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에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원 기자 kimsy@

인천, 전기버스 도입시 2685억원 절감

인천연구원, 전기버스 보고서 발표 시내버스 업체 전기버스 교체 '긍정적'

인천지역에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10년 동안 268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 연구' 결과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156개 노선, 1861대를 기준으로 2019년~2028년까지 압축천연가스버스(CNG) 1678대, 경유버스 183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할 경우 총 2685억원 규모의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됐다. 시내버스의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면 CNG버스는 3600만원, 경유버스는 4090만원이며 전기버스는 2100만원이다. 전기버스 연료비 절감비율은 CNG버스의

41.7%, 경유버스의 48.7%수준이다. 또 연구원은 전기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전기버스 교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중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버스 배터리 가격 인하와 차량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기버스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간 운행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하는 협력사업과 이를 유인하기 위한 관련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버스 도입사업은 단순히 지역 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차량 보급 계획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사회경제부문에 큰 변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